

살아가는 힘 키우는 전북교육... 천호성 교육감의 포부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성장하는 교육 만들 것”

전북교육 1문 1답

천호성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7월 1일 취임하며 새로운 전북교육의 출발을 알렸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호성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천 교육감은 전날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투자 소식과 다른 지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접하며 전북 교육은 훨씬 더 도전적이고 차별화된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은 전북으로 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교육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교육 방향으로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제시했다. 천 교육감은 “영어병식 교육이 아니라 지역에 맞고 지역에서만 가능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은 개인의 취업이나 행복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소멸 문제를 교육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며 “정치·경제와 함께 교육이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세방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 정책으로는 기초학력과 진학·진로교육을 꼽았다.

도전 중심 교육도 강조했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능력과 실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할 것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와 청렴 강화 등을 언급했다. 다만 “호 열정에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기보다는 필요한 업무를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며 형식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행정 철학도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전북교육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천호성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왔다.

Q.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과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전북교육을 제대로 바꿔달라는 도민들의 엄청난 요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기대의 무게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단번에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서로 맞물려야 비로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학력은 살아가는 힘...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

지역소멸 극복·기초학력·도전 중심 교육도 강조

교육감으로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학교와 지역 곳곳의 의견을 충분히 살피며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보여주지 성과보다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즐겁게 찾고, 교사는 수업에 몰입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그 기본부터 다시 단단히 세우겠습니다.

Q. 전북교육의 비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과 슬로건 모두 기 빛나게, 다함께 새롭게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저는 학력을 ‘살아가는 힘’으로 정의합니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어느 정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입니다.

모두가 빛나게, 다함께 새롭게 라는 슬로건은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꺾이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전북에서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Q. 취임 전부터 학교현장을 직접 찾으셨습니까. 가장 절실하게 느낀 문제는 무엇입니까?

-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전주미산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학교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아동학대 신고 등이 이어지면서 담임 교사가 여러 번 바뀌었고, 교육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특히 장기 미등교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관계기관의 대응도 지연되는 등 학교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학교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지역, 더 나아가 국가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민원과 갈등을 홀로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학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작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위원회에 교사 참여를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Q. ‘교육장 지역추천제’, ‘합의제’ 검토한 점도 도입 계획은 어떻게 추진

하시 예정이신지요?

-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추천제 형태를 취하되 최종 인사권과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합의제 감사관에 역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통해 행정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형태로 정착시켜겠습니다.

Q. 기초학력 책임제는 어떻게 실현할 계획입니까?

-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이후 모든 학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까지 세밀하게 살펴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며, 교육 격차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Q.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이 문제를 대립 구도로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입니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Q. AI 시대,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입니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의 자아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새만금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진학진로교육원’을 설립해 학교 안팎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학습·활동·심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맞춤형 진로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Q.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찰, 지자체, 전문가와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Q. 인수위원회 활동이 중반을 넘었습니다. 중간평가를 해주신다면?

- 이번 인수위원회는 구성 단계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역소멸과 학교소멸 문제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교육장 지역추천제’나 ‘교육혁신 선도지역’ 같은 과제도 이런 흐름 속에서 도출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재정, 조직,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과정은 공약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밑그림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상근 기자

‘레벨테스트 금지법’ 현장 안착 나선다

전북교육청, 내달까지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대상 특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도내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통한 선발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률의 취지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4세 고시 등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예방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점검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서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원법에서 금지한 레벨테스트(시험·평가)를 통한 입학 또는 편성 여부 △선행학습 등 부적절한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이다.

교육청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개정 학원법은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완주 A유치원 원장 갑질 신고 10개월, 아직가·피해자는 같은 곳에”

전교조 전북, 즉각 분리·갑질방지 조례 개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완주 A유치원 원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 교직원들이 여전히 원장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완주 A유치원 원장을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고,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일부 갑질 행위를 인정해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징계 절차와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감사관실이 갑질 일부를

인정해 징계를 요구한 만큼 피해 교직원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심의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이며, 피해자 보호는 교육청이 즉시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같은 근무환경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특정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완주 A유치원, 전주 A특수학교, 전주 A중학교 관리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관리자 갑질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학교급은 달랐지만 폭언과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 침해 의혹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교직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전교조는 “형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에는 신고 이후 피해 교직원을 즉시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와 임시조치, 신고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결국 피해자는 조사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장기간 같은 근무환경에 놓이게 되고 현장의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피해자

보호는 징계가 끝난 뒤가 아니라 신고와 조사,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사후 징계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가·피해자 즉각 분리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기간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갑질 방지’ 중심으로 개정해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조사 결과 통보, 독립적인 갑질사례판정위원회 설치, 갑질 예방교육 및 2차 가해 방지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